

2026

wello!

정부 예산 리포트

생활밀착 핵심만 쏙 정리

2026. 01

Wello Data Lab



목차

예산 흐름 이해하기	03
예산 부수 법안	04
부처별 생활 밀착형 예산	04
신규, 확대되는 생애주기별 지원	21
26년도 웰로와 함께	27
국회 확정 예산 주요 특징	28
출처 및 문헌	32

국회는 '25.12.2일(화)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정부안 728조 원에서 1,000억 원 감액한 727조 9,000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2026년 정부의 기본 기조는 '확장재정'이다. 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려 미래 산업과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 아래,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8% 이상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도 보다 선명해졌다.

첫째,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둘째,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셋째, **국민 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가 핵심 축이다.

예산 흐름 이해하기

편성-집행-결산까지 한눈에 보는 재정 과정

1. 자원 조달

국가 재정은 국세(대략 60% 수준), 세외 수입, 기금 수입으로 마련된다.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우편수입·과태료·국유재산 매각대금, 고용·사회보험료 등이 재원을 구성한다.

2. 예산 편성

각 부처는 다음 해 추진할 사업의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작성한다. 국무회의 조정 후 국회가 심사·의결하여 최종 예산이 확정된다. 이는 "나라 살림의 공식 계획"이 된다. 예산 편성 시점(국회 제출 기한 등)은 헌법·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제출, 30일 전 의결 규정이 있다.

3. 예산 집행

확정된 예산은 월별·분기별로 나누어 사업 현장에 배정된다. 집행 지침을 통해 조기 집행·불필요한 지출 억제 등이 관리되며, 필요한 경우 전용·이용·이체로 예산이 조정된다. 모든 자금 흐름은 디브레인 시스템에서 관리된다.

4. 결산과 성과 평가

연말에는 실제 집행 내역을 정리한 결산을 진행하며, 감사원과 국회가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어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사업 효과를 평가해, 다음 해 정책과 예산에 개선 사항을 반영한다.

5. 국민 참여

열린재정을 통해 재정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참여예산·주민참여예산으로 국민의 제안을 예산에 반영한다. 정보공개청구와 예산낭비신고를 통해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예산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기관의 역할도 함께 강화되고 있다. 웰로와 같은 민간 데이터 플랫폼은 복잡한 정책·예산 정보를 수집·정제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 간 정보 접근 격차, 예산 집행의 편차, 정책 수요와 홍보의 불일치 등을 식별하고 이를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예산이 실제 필요한 대상에게 더 정확히 도달하도록 지원하는 재정 모니터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한다.

예산 부수 법안

예산안은 정부가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지출)뿐 아니라 '어떤 세금을 얼마만큼 걷는지'(세입)까지 함께 설계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런데 세금은 각각의 항목과 세율이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입 규모를 조정하려면 관련 법률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이렇게 예산안과 함께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세금 관련 법 개정을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하며, 2025년에는 총 16건이 예산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2025년에 함께 통과된 16건의 예산 부수 법안 가운데, 일상과 직결되는 주요 생활밀착형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개정안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각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

2. 교육부 특별회계 개편

-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출처: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국회](#) 2025.11.28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정보 시스템](#) 2025.12.0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부 2026년도 예산 106조 3,607억 원 확정](#) 2025.12.03

부처별 생활 밀착형 예산

이 장에서는 각 부처별 예산 가운데 우리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행정안전부 2026년도 예산은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5년 대비 4조 8216억 원(6.7%) 증가했다. 지방교부세 69조 3549억 원, 인건비·기본경비 4310억 원, 사업비 7조 1196억 원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4531억 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3조 7325억 원(전년 대비 +58%)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국가 재정 지원금

지방교부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국가 재정 지원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 격차 해소와 지방발전을 위해 국가가 별도 관리하는 '지역전용 특별 예산 통장'

주요정책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경제 지원 강화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국비 지원이 의무화됨
-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1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 → 지역경제 안정적 활성화 지원

2026년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정부의 국비지원이 의무화되었다.

이는 종전처럼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국가가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과 예산 확대 의미

1.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의 안정화

-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
- 지역 소비 선순환 확대
- 지역 경기 부양 효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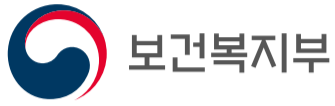
2. 지자체 예산 부담 완화

기존에는 국가 지원이 매년 다르게 책정돼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보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법 개정 후에는 국가가 지원을 책임지는 구조가 되어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든다.

3. 발행 규모 및 할인 정책 운영의 예측 가능성 확보

- 상품권 발행 규모를 안정적으로 계획
- 할인율(예: 10%) 유지
- 소상공인 대상 환전 지원 등을 중장기적으로 설계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행정안전부 예산 76조 9,055억 원 확정](#) 2025.12.03



보건복지부 예산은 곧바로 우리의 건강·돌봄·생활안정과 연결되는 만큼, 그 변화는 의미가 크다. 2026년 예산은 137조 4,949억 원으로 확정되어 전년 대비 12조 원 증가(+9.6%)하였으며, 정부안 대비 1,531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번 증감이 실제로 어떤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간단히 훑어본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170억
- 중증외상 거점센터 헬기 계류장 설치 +45억
- 국립중앙의료원 정책지원센터 구축 +13억
-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소아청소년과 2개소) +13.2억
- 분만취약지 개선(시설·장비 12개소) +18억
-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지역 소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30개소) +18억
- 의료혁신위원회·시민패널 운영 +34억

건강관리 기반 확충

-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고위험군 연계 강화 +28억
-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98억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 지원 확대 +12억
- 간호사 책임보험·간호조무사 교육 확대 +6.2억
-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준비 +7.4억

돌봄 및 아동보호 강화

- 지자체 통합돌봄 전국 확대 + 시스템 구축 +136.7억
-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확대(시범 20→100, 본사업 130→150) +24억
- 가정위탁 아동 보호비 확대 +10억

장애인 지원 강화

- 장애인거주시설 증·개축(10개소) +34.1억
-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 단가 인상 +42.2억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확대 및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69.6억
-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강화 +4억



주요 감액

- 기초연금 △2,249억
 - 부부 2인 가구 비중·감액 수급자 변수 조정
- 기타 △311억
 - 한국형 ARPA-H △20억
 - 의과학자 도약 프로그램 △2억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170억 등

주요정책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보건복지부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동주민센터·복지관·푸드뱅크 등에 코너 신규 설치로 지원한다. 전국 56개소에서 시작해 연말까지 약 70개소로 확대된다.

이용자는 1인당 3~5개의 먹거리 및 생필품(2만원 한도)을 지원받고, 2차 이용 시 의무 상담, 필요 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공적 복지서비스로 연결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2026년 예산 137조 4,949억 원 확정 2025.12.03](#),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12월 1일부터 운영 시작 2025.11.30](#)

보건복지부 예산과 함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인상되어 지원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76만 5,444원 → 82만 556원, 4인 가구 195만 1,287원 → 207만 8,316원으로 상향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 효과로 2026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4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2025년도 및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5년	239만 2,013	393만 2,658	502만 5,353	609만 7,773	710만 8,192	806만 4,805
'26년	256만 4,238	419만 9,292	535만 9,036	649만 4,738	755만 6,719	855만 5,952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7.20%,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비중 74.4%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6.78%,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비중 15.6%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되었다.

2025년도 및 202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 32%)	'26년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207만 8,316	241만 8,150	273만 7,905
	'25년	76만 5,444	125만 8,451	160만 8,113	195만 1,287	227만 4,621	258만 738
의료급여 (중위 40%)	'26년	102만 5,695	167만 9,717	214만 3,614	259만 7,895	302만 2,688	342만 2,381
	'25년	95만 6,805	157만 3,063	201만 141	243만 9,109	284만 3,277	322만 5,922
주거급여 (중위 48%)	'26년	123만 834	201만 5,660	257만 2,337	311만 7,474	362만 7,225	410만 6,857
	'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교육급여 (중위 50%)	'26년	128만 2,119	209만 9,646	267만 9,518	324만 7,369	377만 8,360	427만 7,976
	'25년	119만 6,007	196만 6,329	251만 2,677	304만 8,887	355만 4,096	403만 2,403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2025.07.31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총 62.8조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4.6조 원(8.0%)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이다. 정부안(62.5조 원) 대비로도 0.3조 원이 증액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반영되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조 원 확대되어,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재원 구성 측면에서는 회계예산이 24.6조 원으로 1.9조 원 증가했고, 기금은 38.2조 원으로 2.7조 원 늘어나 주택·교통·도시 분야 전반에 대한 안정적 재정 뒷받침이 가능해졌다.

주거 안정

- 공적주택 19.4만 호 공급
- 공공임대 내 육아친화 플랫폼
- 청년월세지원 '상시사업' 전환
- 주거급여 확대(월 20→21만 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 | |
|-------------|---|
| 청년 | 청년특화 공공임대(역세권 등), 행복기숙사(대학인근 등) 학업·취업 등을 고려한 특화주택 지속 공급, 청년월세 확대 등 청년 주거부담 경감 |
| 출산가구 | 육아친화 공공주택(초등학교 인근 `26, 10곳 선정), 세대통합형 주택(`27, 시범사업 착공) 등 양육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주택 공급 |
| 고령자 | 은퇴자마을 조성(`26.下, 기본계획 수립), 돌봄·무장애 설계 고령친화 임대주택 공급(`26, 3천호) 등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 |
| 취약계층 |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반지하·쪽방 등 주거상향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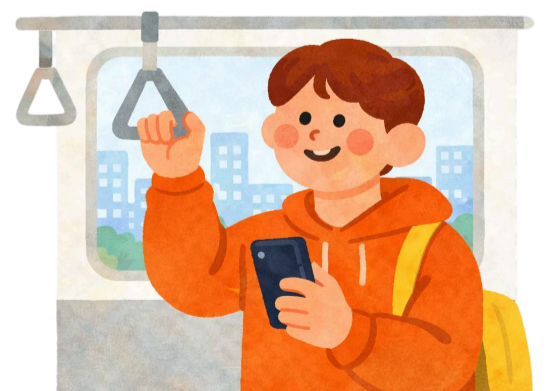
*`25, 195만 → `26, 202만 가구 / ** 보증금(최대 1억원, 무이자 0.5억원)·이사비(40만원) 지원 등

교통 혁신: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부담없는 교통서비스 제공

- K-패스 개편(어르신형 + 정액권 신설, 취약계층 대상 환급기준 최대 3.5만 원 인하)
- GTX·광역버스 확충 등을 통한 출퇴근 편의 제고
- 코레일-SR 통합 본격 추진
-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혁신: 음식 가격과 품질 등 휴게소 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 독립성 있는 전문 공공관리 회사* 설립 추진(`26.上)

약자 보호

- 여객기사고 피해지원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7,500호), 예방 컨설팅·상담 강화
- 전세금반환보증 요건(전세가율) 단계적 강화 추진
- 공공임대 무상거주 대상 확대 등 지원 강화(`26.上, 특별법 개정)



K-패스: 모두의 카드 주요정책

사업 시행 1년 반 만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 자리 잡은 K-패스는 내년에 더 기대되는 교통정책이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상한선으로 이를 넘겨서 대중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분 모두 환급(지역별·유형별에 따라 환급 기준금액 차등)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4개 지역(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

종류는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로 구분되며,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예시, 일반국민·수도권 기준) 일반형 수단 9만원, 플러스형 수단 3만원 지출
→ 환급 방식 : 모두의 카드 일반형 2.8만원(9만-6.2만), 플러스형 2만원(12만-10만)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금액

구분	일반 국민		청년·2자녀·어르신		3자녀 이상·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만원	10만원	5.5만원	9만원	4.5만원	8만원
일반 지방권	5.5만원	9.5만원	5만원	8.5만원	4만원	7.5만원
우대지원지역	5만원	9만원	4.5만원	8만원	3.5만원	7만원
특별지원지역	4.5만원	8.5만원	4만원	7.5만원	3만원	6.5만원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사전에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하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기본형 환급률 일반 국민(어르신 포함) 20% → (개선) 어르신 유형 30%(+10%p)

'26년부터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들이 대중교통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6년 국토교통부 예산 역대 최대 62.8조원 확정 2025.12.0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정부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2025.12.1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2025.12.12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19조 1,6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79억 원이 순증되었다.

2025년,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새 이름을 달면서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환경·에너지 정책도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이제는 기후, 에너지, 환경이 분리되지 않는 시대가 된 만큼, 정책 역시 통합적 방향으로 전환되는 중이다.

주요정책 국민 체감형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정책

- **신규** 전기차 전환지원금(1,775억)
- **신규** 전기차 화재·배상 걱정을 줄이는 전기차 안심보험(20억)
- **신규**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난방전기화) 145억
- **확대** 일회용품 다량 사용처 중심 다회용기 보급 확대(100억→157억)
- **확대** 에너지바우처 4,815억 → 4,940억(+2.6%)

2026년부터 전기·수소차 전환과 생활밀착형 환경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우선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보조금에 더해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부담을 낮춘다. 이와 함께 그간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던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모든 차종에 대해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안심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인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신규로 추진하고, 지역축제·카페·음식점·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을 기존 119개 지자체에서 163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3,140만 개의 일회용품 사용을 감축하는 등 국민 일상 속에서 체감 가능한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및 기금 19조 1,662억 원 확정, 올해 대비 9.9% 늘어
2025.12.03, 내년 '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 원 지원...'전기차 안심보험' 도입 2025.09.0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2026년 예산은 20조 1,362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정부안 대비 1,012억 원 증액되었다. 전년 대비 7.4% 증가한 규모다. 현장 수요를 반영해 더욱 촘촘하게 보완된 주요정책을 살펴본다.

천원의 아침밥

- **신규** 산단근로자 등 직장인 대상 아침·점심밥 지원
- 대학생 식수인원 450만 식에서 540만 식으로 확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재개

- '23년 중단 → 2026년 **158억 원 재편성**
- 임산부 **16만 명 대상**, 월 최대 4만 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구매 지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 초등학교 1~2학년 60만 명 대상 과일간식 지원 재개

농식품 바우처

- 지원대상(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 청년 추가)
- 지원기간(10개월 → 12개월)

활기 넘치는 농촌 만들기

-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 주민 월 15만원 지급
-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방치된 빈집을 청년 창업 공간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햇빛소득마을' 사업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의 에너지 전환 기여 및 전력 계통 확보 및 에너지 공급 장치 지원
- 청년들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성장-은퇴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
-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 산업을 포괄하는 'K-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액을 150억 달러로 설정

온라인 도매시장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유통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낸다. 내년도 거래 목표액을 1조 5천억 원으로 설정했으며, 기존 도매시장의 경쟁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유통 비용을 줄이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동물 복지 정책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동물 복지 정책 또한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법정 동물 보호의 날'을 지정한 것은 동물 복지를 중요 국정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형 표준 수가제'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농업 지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복합 공간으로 재창조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농식품부 예산, 총 20조 1,362억원 확정](#) 2025.12.03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5대 중점과제, 3대 개혁·쟁점과제 추진방안 발표](#) 2025.12.11



성평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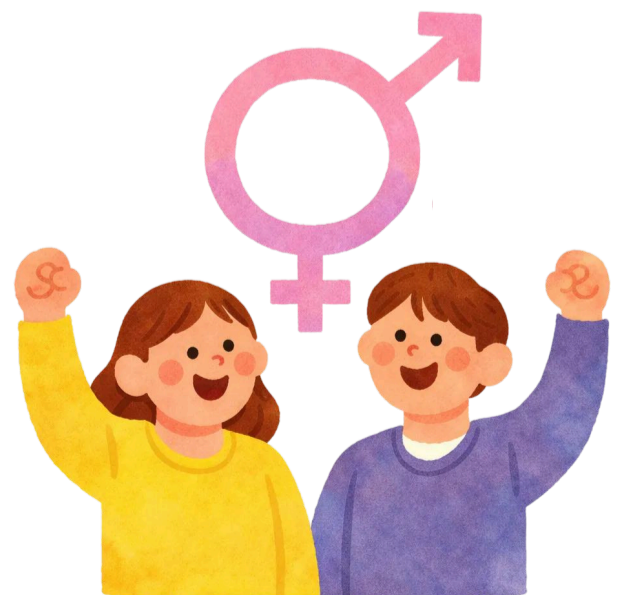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새롭게 출범한 올해, 부처 예산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성평등가족부 예산은 총 2조 87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전년 대비 2,303억 원 증가(+13.0%)했다.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기반을 강화하고, 아이돌봄·한부모 지원을 확대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특히 폭력·디지털범죄 피해 대응, 청소년 보호, 상담 지원 강화 분야가 증액되었다.

-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14억)
- 폭력피해자 법률지원 확대(+9억)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사업비(+2억)
- 청소년상담 '1388' 대기시간 단축(+4억)
-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치유 프로그램 확대(+2억)
- 청소년복지시설 개보수(+4억)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54억)

성평등·안전인권 강화 (+11.8%)

- 청년세대 성평등 문화 확산 신규 추진
-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지원 확대
-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규 도입



청소년정책 강화 (+9.8%)

- 청소년 그룹활동 신규 지원
- 청소년시설 안전보강
-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 신규 도입
- 취약·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가족정책 대폭 확대 (+13.6%)

-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및 돌보미 처우 개선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다양한 가족·위기가족 지원 강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예산, 2조 87억 원 확정](#) 2025.12.03



AI 시대의 교육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정해진 답을 찾는 '해법 능력'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질문 능력'이 중요해진 시대이다. 인공지능이 막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제시해주는 만큼,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결과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창의성과 개선 의지를 키우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정부의 교육 혁신 전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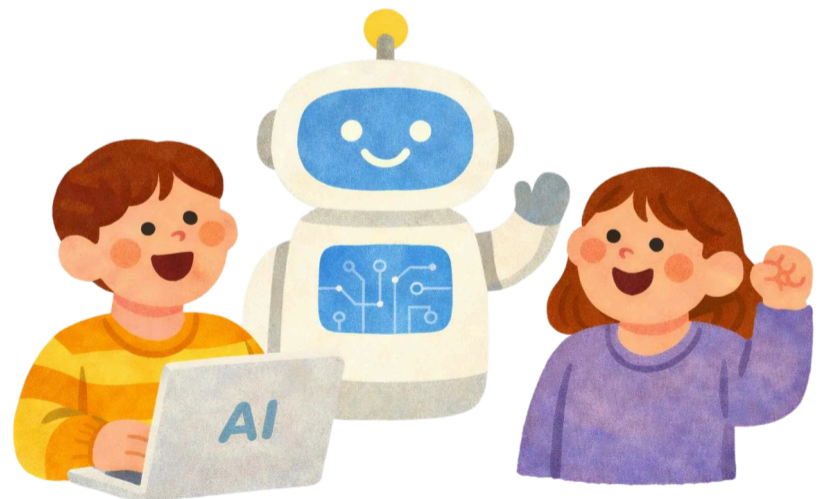
교육부 2026년 예산은 106조 3,607억 원으로 확정되며 정부안 대비 945억 원이 증액되었다. 올해 주요 변화로는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5년 연장이 포함되어, 교육 분야 재정 구조가 크게 개편된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 **신규** 연구중심대학(거점국립대 3교)

국가책임 AI 인재양성

- **신규** 대학생 AI 기본교육지원 (20교)
- **신규** 예비교원 교육과정 개발
- **신규** 인공지능 거점대학 (3교)
- **신규** AI/SW 학업장려대출 (연 200만원)

**이공계 인재 양성**

- **신규**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400명)
- **신규** 첨단분야 인턴십·글로벌 교육과정 지원 (620명)
- **신규** 반도체 공동연구소 연합교육과정 운영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 돌봄 취약지역에 거점·연계형 돌봄기관을 확대('25. 56개→'26. 200개)하고, 지역여건과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기관수급 관리* 지원
*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 퇴로 지원('26.5~) 및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지도 시범 구축('26.하)
- 무상교육·보육의 지원 대상을 확대('25년 5세→'26년 4~5세)하고, 0세반부터 교사-아동 비율을 개선(現1:3→改1:2)하여 질 높은 환경 조성
- 교육청-전문기관이 협업하여 적기에 지원하는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추진('26.2~)
- 기존 초1·2 무상 방과후(매일 2시간)에 더하여 초3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원)을 제공, 초3 방과후학교 참여율 확대('25. 45% → '26. 60%)
*간편결제 인프라 '제로페이' 연계('26.3, 시범 도입)를 통해 업무부담 경감 및 이용자편의 제고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를 완화('26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2만원 인상)하고 모든 교사의 4대 분야* 역량 향상을 지원
*①교육과정 실행, ②성장·발달, ③정서·심리, ④특별한 영유아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 학습결손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25.12 개통)
*①기초학력 수준 및 심리정서 진단, ②학생의 학습 이력 연계, ③보정학습 자료 제공 등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학습콘텐츠(e-book, 학습지, 동영상) 제공, 1교실 2교(강)사제*, 방과후 1:1 멘토링('26년~, 6만명) 등 학습 지원
*'25년 4,481교(전체 학교의 37%) → '27년 7,200교(전체 학교의 60%)

학생 마음건강 지원

-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긴급지원팀*을 확충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학생 마음바우처 확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학생·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 관할청의 고발 강화*, 학부모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및 학생의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등 엄정 대응
*고발 요건과 판단기준, 절차·방법 등 주요 내용을 「교원지위법」 등에 신설
**출석정지 등 중대한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범위 및 보존기간 등 검토
-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 확대(現 5일 → 10일 限)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 역사체험 프로그램, 역사캠프 등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을 지원하고, 역사 교원 연수 확대, 현대사 자료 아카이브 구축·지원 등 역사 교원의 역량 강화

「2028 대입개편」에 맞춘 AI 입시 상담 서비스 단계적 고도화

- 26년부터 AI 모델 기반 대학 진학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시
- '27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등 정량평가 중심의 대입전형에 대해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 도입
- '28년부터는 'AI 학생부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도입

국내·외 한국어교육 확산

- 해외 정규 학교에서 운영되는 '한국어반'(한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을 활성화

교육세 배분구조 개편

금융·보험업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2.0조 원
이외 교육세	60%	영유아특별회계 전출	2.6조 원
	40%	보통교부금	1.8조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교육(대학)과 평생교육 전용 재원으로, 국가 세금 일부를 별도로 배정하여 대학 운영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뒷받침한다.
영유아특별회계	0~5세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별도 특별회계로, 교육세 수입의 60%를 세입으로 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운영과 무상교육·보육 비용을 지원한다.
보통교부금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용도 제한 없이 배분하는 기본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지원이다.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개정으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대학 육성을 강화하고, 국가 AI 인재 양성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추진에 활용한다. 아울러 영유아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해 돌봄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사업도 영유아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향후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부 2026년도 예산 106조 3,607억 원 확정](#) 2025.12.0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2025.12.12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예산은 7조 8,555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전년 대비 7,883억 원(+11.2%) 증가했다. 'K-컬처 300조 원 시대'의 출발점으로 보고,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를 본격화한다. 창작자와 국민 모두가 문화의 혜택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 접근성과 관광·체육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확충하는 데 의미가 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 **신규** 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180억 원
- **신규** 예술인 복지금고 50억 원
- **신규**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보증) 250억 원
- 청년문화예술패스 361억 원(+191억 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2,915억 원(+279억 원)

관광 활성화

- **신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65억 원
- **신규** (가칭)핫스팟 가이드 10억 원
- **신규** 케이-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 50억 원
- 근로자 휴가지원 107억 원(+37억 원)

체육 활성화

- **신규**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75억 원
- **신규** 예비국가대표 양성 30억 원



주요정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확대

문화 분야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계층·연령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문화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과 청년의 문화예술 경험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청소년과 생애전환기 대상자에게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요정책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 16만 명에서 내년 19~20세, 28만 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이 공연·전시 등 문화 경험의 기회를 얻게 된다.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체부 2026년 예산 7조 8,555억 원으로 확정 2025.12.03,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연다...문체부, 콘텐츠 예산 26% 확대 2025.09.05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은 노동 존중을 기반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큰 틀에서 '일터의 혁신 + 취약계층 보호 + AI·디지털 인재양성'에 초점이 맞춰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총규모 및 재원 구조

- 총지출: 37조 6,761억 원
 - 2025년 본예산 대비 +2조 3,309억 원(+6.6%)
- 국회 심의 과정에서
 - 증액: 24개 사업 +836억(거짓구인광고 방지 모니터링 등)
 - 감액: 10개 사업 -232억(AI 공동훈련센터 등)
 - 정부안 대비 +604억 원 순증
- 재원별 구성
 - 일반회계: 5조 9,082억 원 (+14.7%)
 - 국민취업지원제도(1조 128억), 두루누리(9,443억), 청년도약장려금(9,080억) 등
 - 특별회계: 7,576억 원 (+24.6%)
 - 폴리텍대학(3,136억),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2,176억), 사회적기업육성(321억) 등
 - 기금: 31조 104억 원 (+4.8%)
 - 구직급여(11조 5,376억), 산재급여(8조 1,463억), 모성보호(4조 728억) 등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 **신규** 워라밸+4.5 프로젝트(주 4.5일제 시범)
- **신규** 주 4.5 특화컨설팅
- **신규** 육아기 10시 출근제('26.1월)
- **신규** 방학 중 육아휴직(단기 육아휴직, '26.7월)
- **신규** 일생활균형 네트워크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출산급여, 배우자출산급여, 유산·사산급여, 난임치료,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급여 등 전반 인상·확대
- 육아휴직 지원금: 1,236억 → 1,566억(+330억)
- 대체인력지원금: 1,194억 → 1,303억(+109억, 월 120만→130~140만)
- 업무분담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 구직급여: 10조 9,171억 → 11조 5,376억(+6,205억, 163.6만 명)
- 조기재취업수당 5,852억, 실업크레딧 667억

일과 삶의 균형: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 제도 요건 강화, IT 기술을 활용한 출퇴근 기록 의무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강력한 기획 감독을 예고했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인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심야 노동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 변경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노동의 자주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62년 만에 노동절이 복원된 만큼, 온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향유하고 노동존중 문화의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26.5.1 노동절 행사).

임금·복지격차 해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①원칙 법제화 + ②임금정보 제공 강화 + ③초기업교섭 활성화 등을 담은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법제화와 함께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초기업교섭 모델 구축 및 민간 자율확산을 도모하면서, 임금직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무·직위·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제공한다.

임금체불의 법정형 상향(3년·3천만원 → 5년·5천만원, ‘26.1월)을 추진하고, 임금구분지급제 의무화를 추진(‘26.1월)하여 원하청 관계에서의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장 도산 시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3개월→6개월), 상습·반복 체불 시 처벌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체불 관련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더 안전한 일터: 산업재해 감축 노력

‘25년 3분기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75명으로 전년 대비 26명이 증가했고,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수는 감소함에도 경제규모 확대, 임금총액 증가 등으로 ‘25년 9월 임금체불액(1조 6,413억원)은 전년보다 7.8% 증가했다.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소규모의 사업장을 산업안전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전환한다. 분야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작은 사업장까지 정책이 닿는 ‘길목(접점)’을 확보한다. 일터지킴이(1천명) 등과 함께 정책길목을 활용해 업종별 핵심 위험요인과 안전수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작은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위험한 기계교체, 안전장비 구입 등)을 위한 약 5,400억원의 재정지원을 신속히 연계한다(‘26년 5,371억)

중견·대형사업장은 자율적 예방을 촉진하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중대재해 발생 시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사망사고 다수·반복기업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도입 등 실효적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참여·권리를 강화한다.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하여 사업장의 재해현황, 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투자 현황 등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산재처리기간 단축('24년 228일 → '26년 160일)과 함께 산재 신청부터 직업 복귀까지 종합 지원한다.
중대재해 피해 동료, 재난대응 노동자 등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 고객응대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이행 시 제재도입 등의 정신건강 장해 보호를 강화한다.

청년의 일할 기회 격차 해소

20·30대 70만 쉬었음 청년 등의 취업애로가 계속됨에따라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본격 추진한다.
기존 대학생 중심의 청년 DB를 제대군인, 정부지원사업 참여자 등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정부가 먼저 다가갈 예정이다. 청년의 나이를 29→34세로 상향하여 20대뿐 아니라 30대 청년에게도 일할 기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별 맞춤지원 (청년·중장년·장애인)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8,457억 → 1조 128억(+1,671억, 35만 명, 수당 월 50→60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80억(+1,308억, 수도권·비수도권형 개편)
- 청년 일경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대학일자리+센터, 고졸특화훈련 등 전반 강화
- 쉬었음 청년·경계선지능청년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 신설

중장년

- **신규** 고령자통합장려금, 중장년 특화 훈련(폴리텍), 경력지원제 확대원
- 중장년 내일이음 패키지 확대, 일손부족 일자리 인센티브 시범 도입

장애인

- **신규** 발달장애인 재직자훈련, 장애인 AI 활용 강화 프로그램, 디지털훈련센터 확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국회 의결](#) 2025.12.0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2025.12.11



신규, 확대되는 생애주기별 지원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 **신규**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 **신규** 청소년 그룹활동
- 보육교사 수당 2만 원 인상 및 추가 채용 교사 수당 지원
- 0~2세 기관보육료 5% 인상
- 무상교육·보육 대상 5세 → 4~5세로 확대
- 0세반 교사:영아 비율 1:3 → 1:2 개선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지역 소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30개소)
- 청소년상담 '1388' 대기시간 단축



주요정책 청소년 그룹활동

청소년 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참여형 그룹 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한 또래 관계 형성, 특기와 소질 계발 등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 추진방향
 - 청소년 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분야별 참여형 그룹 활동 지원체계 마련
 - 우수사례 보급을 통한 지역 중심의 청소년 참여형 활동 활성화
 - 자기주도적 활동 지원으로 참여 청소년의 역량 강화 도모
 - 지원대상: 지역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등 연계 청소년동아리 활동과 프로젝트팀 지원*
- *(사업규모) 청소년 동아리활동 1,000개, 프로젝트팀 20개

청소년동아리 활동

문화·예술·스포츠·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공통적 목표와 관심사를 가진 청소년 자기주도 자율적 모임 활동 지원

*(9개 분야) : ① 문화/예술활동, ② 과학/정보활동, ③ 모험/개척활동, ④ 자원봉사활동, ⑤ 직업/진로활동, ⑥ 교류활동, ⑦ 건강/보건활동, ⑧ 자기(인성)계발 활동, ⑨ 환경보존활동

프로젝트팀

청소년 스스로 인문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관점과 사고를 통해 탐구·연구, 토의·토론 등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팀 활동 발굴·지원

* 문학·철학·역사·윤리·경제·도시학·사회학 등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과 사회를 깊이 이해하는 주제 선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여성가족부, 2026년 청소년 국제적\(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예산안 편성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 2025.09.25

육아가정 지원 정책

- **신규** 육아기 10시 출근제
-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 확대
- 취약지 산부인과 장비 교체
- 산후조리원 평가시스템 구축
- 출산급여, 배우자출산급여, 유산·사산급여, 난임치료, 육아휴직 등 전반 인상·확대
- 대체인력지원금: (월 120만→130~140만)
- 업무분담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주요정책 육아기 10시 출근제

최초로 시행한 곳은 지자체 단위로, 광주광역시에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만 12세(초등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최대 30만원, 최대 1년 지원한다.

*출처: 정부24 [초등학부모10시출근제](#) 2025.11.27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달라지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 2025.12.04

청년 지원 정책

구직촉진수당 인상

- 취약계층 1유형 대상(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 가구 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 50만원 → 60만원으로 인상 (최대 6개월)

근속 인센티브 신설

- **신규** 워라밸+4.5 프로젝트(주 4.5일제 시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비수도권) 2년간 480만 원
- (인구감소지역) 2년간 우대지역 600만 원, 특별지역 720만원 지원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 운영 신설

- 쉬었음청년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창업 지원

- 내년부터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과정을 60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AI, 딥테크 특화과정 신설
- 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신설하여 청년 예술인의 꿈을 응원하고 국내 미술 시장을 활성화
-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신설하여 국제무대 진출 기회를 넓히고, 세계 속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도전을 지원하고 케이-컬처 확산의 기반 강화

교육 지원

- 대학에 AI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및 선도기업이랑 우수대학이 참여하는 탐티어 AI 융복합 과정을 신설해서 AI 인재를 1만 명 육성
- 대학과 기업이 공동 개발 운영하는 학부 대상 단기 집중 교육과정 확대
- 혁신인재 조기 양성을 위한 학·석·박 패스트트랙 신설
-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약 206억원 증액

주거 지원

-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해 주는 국토교통부 월세지원 상시화
- 청년 공공임대가 2만7천호에서 3만5천호로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 현행 청년도약계좌와 대비하여 납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 지원 확대 (3~6% → 6~12%) 등 혜택을 강화
-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청년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면서 가구소득 중위소득 200%이하 이면 가입 가능
- 정부에서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6% 또는 12%를 더 지원
- 일반형은 청년의 월 납입금액(최대 50만원)에 정부기여금 6% 매칭,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은 우대형으로 정부기여금을 12%로 매칭하여 중소기업 청년의 여건 개선에 기여
- 3년 만기 시 최대 2,200만 원

청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 확대

- 혜택 대상 연령이 기존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 공제금액 월 40만 원 + 30% 추가 공제에서 월 60만 원 + 30% 추가 공제로 인상



K-패스 확대

- 정액패스 신설

구분	청년	
	일반	플러스
수도권	5.5만원	9만원
일반 지방권	5만원	8.5만원
우대지원지역	4.5만원	8만원
특별지원지역	4만원	7.5만원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에 대한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
- 기업 선택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 지원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
- 해당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부산시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제외) 중 공모를 진행해 선정하는데, 우선 10만팀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

*출처: 기획재정부 무엇이든 물어보시게 2026 청년지원 예산안! 2025.11.17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 국회 확정 2025.12.0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직장인에 '든든한 한끼'..."내년 예산, 국민 위해 이렇게 씁니다" 2025.11.14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2025.09.2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2025.09.20

중장년 지원 정책

오래 일하고자 하는 중장년을 위해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 관리와 재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 **신규** 고령자통합장려금
- **신규** 일손부족 일자리 인센티브(시범)
- **신규** 워라밸+4.5 프로젝트(주 4.5일제 시범)
- 중장년 특화 과정(폴리텍)
- 경력지원제 확대
- 중장년 내일이음 패키지 확대

경력 전성기에 해당하는 40대부터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스킬링·리스킬링 중심의 커리어플래닝 서비스를 통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상담·교육·취업을 연계 지원하는 중장년내일센터와 경력설계부터 취업알선까지 아우르는 중장년 내일이음 패키지를 통해 재도약을 뒷받침하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안정적 근속도 함께 지원한다.

주요정책 신규 고령자통합장려금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상향 월 30만원 → 월 40만원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3년간 1,440만원)

주요정책 신규 일손부족 일자리 인센티브(시범)

인력충원이 필요한 업종에 취업한 중장년에게 6·12개월 근속인센티브(총 360만원) 지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국회 의결](#) 2025.12.03

어르신 지원 정책

- 신규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 K-패스 개편(어르신형)
-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주요정책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신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원, 자치센터 등에서 열리는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약 100만 명에게 무료 스포츠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활력 제고는 물론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예산, 국민 위해 이렇게 씁니다](#) 2025.11.14

주요정책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개선되었다. 그동안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최대 월 25만 원까지 깎는 제도가 있었다. 이는 의료비·생활비 때문에 계속 일해야 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는데 “내가 낸 연금을 일한다고 깎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기존 제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25년 기준 309만 원) 초과 시 감액

방식 초과소득을 100만 원 단위 5개 구간으로 구분

감액폭 연금액의 5~25%

- 초과소득 100만 원 미만 → 최대 5만 원 감액
-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 최대 15만 원 감액

개정 내용 A값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구간(1·2구간) 폐지
해당 구간 대상자는 연금 감액 없이 지급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9.8만 명, '23년 기준) 혜택
연금 감액 총액 16%(496억 원) 감소

사례 월 소득 350만 원(64세)

- 개정 전: 연금 2만 500원 감액
- 개정 후: 감액 없이 지급

2025년 소득부터 적용되고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국민 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예산, 국민 위해 이렇게 씁니다](#) 2025.11.27



26년 웰로와 함께

2026년 예산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3대 핵심 축으로 편성되었다. 인공지능과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동력 확충과 함께, 민생 안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가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회복력을 함께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지역과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 성장의 성과가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정책의 방향과 구조를 재조정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균형 발전과 계층 간 기회 격차 완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회복과 성장이 보다 고르게 확산되는 정책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2026년 예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역발전의 비중이 이전보다 한층 확대되면서, 회복과 성장의 흐름이 지역 단위에서 본격화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산업·고용·주거·교육·돌봄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인구 여건, 생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가 강화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은 특정 부처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여러 중앙부처의 핵심 정책 목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은 국가 성장 전략의 보조적 대상이 아닌, 회복과 성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성은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을 실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재정 지출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며, 정책적 의지와 재정 투입 역시 이전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책 효과가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1년 동안 예산이 얼마나 적시에, 그리고 필요한 현장까지 정확히 도달해 집행되는지가 국민의 일상과 지역의 변화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국회 확정 예산은 중앙정부 부처 중심으로 편성되었지만, 정책의 실제 효과는 언제나 지역 단위의 집행과 운영 과정에서 완성된다. 동일한 예산과 제도라 하더라도 지자체의 여건과 집행 방식, 정책 설계의 세부 차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웰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지자체별 정책과 예산 집행 흐름을 지속적으로 추적·분석해 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지역과 계층에서 정책 효과가 집중되거나 반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구조와 집행 과정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책 정보의 단순한 전달을 넘어, 예산과 제도가 실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전달 구조와 실행 과정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26년에도 웰로는 예산과 정책의 흐름을 현장 단위에서 면밀히 관찰하며, 국민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이터 기반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결과를 함께 점검하고,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역할로서, 예산이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



국회 확정 예산 주요 특징

미래 성장·신산업 투자 강화

-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 +975억 원
-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618억 원
→ 신재생에너지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대폭 확대

저출생·미래세대 지원 강화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 +158억 원
- 청년미래적금 인센티브 확대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청년·가족 지원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 최종증장애인 가산급여 +63억 원
-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137억 원
- 서민 생계비 완화(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시가스 신규 보급 등)

국민 안전 및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 가뭄·산불 등 재해예방 예산 증액
- 지역 성장 거점을 위한 산업·인프라 예산 반영(AX 등)

국가전산망 복구 및 디지털 대응력 강화

-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DR 구축 등 +4000억 원

대외경제 정책 조정 반영

- 한미 관세협상 관련: 대미통상프로그램 -1.9조 원(감액)
- 신설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 +1.1조 원
→ 정부안 제출 이후 변화한 외교·통상 환경을 반영하여 국회에서 조정

예산의 주요 증액 내용

미래 성장동력 확보(+1조 7000억 원)

1. 신재생에너지·탄소중립

- 주민참여형 태양광 ESS 설치 확대(+975억 원), 250곳 추가 지원
- 노후 재생에너지 인버터 SW 개선 국비지원율 70%→100% 상향, 7만6000개 전수조사
- 사립학교·공영주차장 태양광 보급(+118억 원),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110억 원)
- 가정용 히트펌프 보급 1600→2600가구로 확대(+55억 원)

2. 첨단산업·수출 경쟁력 강화

- 자율주행 실증도시 신규 조성(+618억 원)
- 완전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222억 원)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 지원(+500억 원)
- 과학영재학교(KAIST·GIST 부설) 설립(+126억 원)
- AI 교육 수료자 채용 벤처기업 80곳에 사업화 자금 지원(+140억 원)
-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1조 1000억 원)
-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3000억 원 추가(+400억 원)
- 온라인 수출 물류비 지원 대상 1131→1591개사 확대(+50억 원)

3. 저출생·미래세대 지원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 확대(+158억 원), 취약지 산부인과 장비 교체(+18억 원)
- 산후조리원 평가시스템 구축(+3억 원)
- 보육교사 수당 2만 원 인상 및 추가 채용 교사 수당 지원(+445억 원)
- 0~2세 기관보육료 5% 인상(+192억 원)
- 조손가정 방문 양육지원 지역 3→7곳 확대, 특별보호아동 지원 360→506명 확대
- 아이돌봄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 구축(+54억 원)
-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 10만→160만 명으로 확대(기존 재직자·영세 소상공인 포함)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4000억 원)

1. 취약계층 돌봄·사회안전망 강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국비 지원 대상 183→229개 지자체로 확대
- 장애인 돌봄 강화: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10% 인상, 최종증 발달장애인 전문수당 15만→20만 원(+94억 원)
- 장애아동 지원: 발달재활 바우처 단가 인상(20만→20만 5000원, +42억 원), 근로지원인 200명 확대(+46억 원)
- 먹거리 기본보장 확대: 취약계층 먹거리·생필품 제공 및 상담 연계 확대(+24억 원)

2. 지역·필수 의료체계 보강

- 지방의료원 인건비 지원 상향: 과목당 6억→7~8억 원(+170억 원)
- 중증외상 대응: 권역외상센터 2곳 헬기계류장 구축(+45억 원)
- 자살 예방·청소년 상담: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대책본부 신설(+20억 원), 1388청소년센터 인력 16명 확대(+4억 원)

3. 민생경제·노동 지원 확대

-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 강화: 이용 한도 폐지, 비수도권·다자녀·저소득층 요금 인하(+305억 원)
- 이자부담 완화: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15.9%→12.5%, 취약계층 9.9%) (+297억 원)
- 도시가스 신규 보급: 미보급 지역 20곳에 배관 건설비 70% 지원(+1400억 원)
- 근로환경·안전 강화: 근로감독업무 경비(+21억 원), 소규모 작업장 안전장비 지원 확대(+42억 원), 산재병원 노후 장비 교체(+72억 원)

4. 문화·체육·출판 지원

- 예술강사 처우 개선: 강사료 및 강의시간 대폭 확대(+29억 원, 특별교부금 포함 +214억 원)
- 은퇴 체육인 제2경력 지원: 지도자 과정 등 제공(+8억 원)
- 출판산업 인프라 강화: 지역 서점 공동수배송 확대, 권역별 선도서점 25→120개로 확대(+60억 원)

국민안전·안보 강화(+6000억 원)

1. 재해·재난 대응력 강화

- 국가전산망 복구 및 DR 구축: +4000억 원
 - 주요 시스템 168개 이중화, 실시간 데이터 백업 체계 구축(+3434억 원)
 - 화재복구 클라우드·장비 임차료 지원(+446억 원)
 -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장비 교체(+62억 원)
- 기후·자연재해 대응
 - 지하수저류댐 설계 확대(2→3곳), 계단식 논·인공습지 등 수질개선(+107억 원)
 - 산불대응센터 10곳 조성, 국가유산 자동소화설비 5곳 설치
 - 도시침수예보 체계 구축(+25억 원)
- 참사 피해자 회복 지원
 - 오송·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현장대응 인력 대상 심리·의료 지원(+47억 원)

2. 해외범죄·국경안보 대응

-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주재관·협력원 54명 총원(+82억 원)
- 지방공항 7곳 여행자정보 시스템 확대, 위해물질 검색장비 도입(+29억 원)

3. 사이버안보 강화

- 사이버공격 예방·탐지·분석 체계 고도화(+145억 원)
-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로 기업 책임성 제고(+77억 원)

4. 국방력 및 군 복무여건 개선

- 휴일 당직근무비 6만→10만 원 인상, 장기복무자 건강검진비 지원
- 소령 대상 직책수행경비 신설(+55억 원)
- 정찰위성 운용센터 조기 구축(+106억 원)
-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금 반영(총사업비 4000억 원)
- 공중전력 확대: 공중급유기 1대 추가 확보(+300억 원)

5. 보훈예우 강화

- 참전·무공영예·4·19공로 등 각종 보훈수당 1만 원 인상(+192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1조 6000억 원)**1.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 7곳 → 10곳(+637억 원)
-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인력중개센터 110→130곳 확대, 근로자 숙소사 10곳 마련(+20억 원)
- 어촌 환경 정비: 해양환경정화선 4척 건조, 해안 정화 범위 확대(+41억 원)
- 전략작물 생산 기반 확충: 조사료 목표면적 확대(1만→2만 ha), 제조비·종자비 지원(+77억 원)
- 농가 부담 완화: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156억 원)

2. 지역 산업·경제 기반 강화

- 지역특화산업 AX 지원: 생산성 고도화 지원(+756억 원)
- 제조업 AI 전환: 지원 지역 5→7곳 확대
- 위기지역 기업 지원: 석유화학·철강 등 이차보전(+67억 원), 고용안정 패키지 확대(+250억 원)

3. 지역 교통·환경 인프라 확충

- 교통망 강화: 호남고속선 증편 위한 변전소 증설(+100억 원), 서대전~회덕 고속도로 확장(+23억 원)
- 물 문제 해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44억 원), 취·양수시설 48곳 조기 준공(+90억 원)

4. 광역교통·지역 현안 지원

- 광역버스 운영 지원 확대: 노선당 14억→15억 원
- SOC·R&D·문화 등 지역 현안: 총 1조 2000억 원 반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728조 규모 2026년 예산 국회 통과...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처리](#) 2025.12.03

출처 및 참고

- 01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국회](#)
- 02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정보 시스템](#)
- 0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부 2026년도 예산 106조 3,607억 원 확정](#)
- 0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행정안전부 예산 76조 9,055억 원 확정](#)
- 0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2026년 예산 137조 4,949억 원 확정,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12월 1일부터 운영 시작](#)
- 06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0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6년 국토교통부 예산 역대 최대 62.8조원 확정](#)
- 0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정부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 0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 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및 기금 19조 1,662억 원 확정, 올해 대비 9.9% 늘어, 내년 '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 원 지원...'전기차 안심보험' 도입](#)
- 1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농식품부 예산, 총 20조 1,362억원 확정](#)
- 12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5대 중점과제, 3대 개혁·쟁점과제 추진방안 발표](#)
- 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예산, 2조 87억 원 확정](#)
- 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부 2026년도 예산 106조 3,607억 원 확정](#)
- 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체부 2026년 예산 7조 8,555억 원으로 확정,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연다...문체부, 콘텐츠 예산 26% 확대](#)
- 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국회 의결](#)
- 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 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여성가족부, 2026년 청소년 국제적\(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예산안 편성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
- 20 정부24 [초등학부모10시출근제](#)
- 21 고용노동부 [2026년 달라지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
- 22 기획재정부 [무엇이든 물어보시게 2026 청년지원 예산안!](#)
- 23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 국회 확정](#)
- 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직장인에 '든든한 한끼'...'내년 예산, 국민 위해 이렇게 씁니다"](#)
- 25 보건복지부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 26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 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국회 의결](#)
- 2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예산, 국민 위해 이렇게 씁니다](#)
- 2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된다](#)
- 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728조 규모 2026년 예산 국회 통과...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처리](#)